

전주시 서기관 보직인사 반발 파행

토목직 승진시키고도 행정직 활용... 특정 서기관 '꽃보직' 내정에 타 국장들 불만

전주시가 지난 9일 서기관 4명 등 승진자를 확정했으나 보직인사를 놓고 일부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인사 불만이 극에 달해 11일 예정된 양 구청장 이임식이 연기되는 등 3일 넘도록 후속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 토목직 출신 서기관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보직 인사가 많아져 서기관 보직과 관련된 비난여론이 거세다.

이번에 승진한 A국장은 토목직 서기관이 가야 할 생태도시국이나 맑은 물사업소에 배치되는데 당연하지만 이 두곳의 보직에서 배제돼 토목직 서기관 3명이나 되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또 M국장의 경우 민선 6기를 김승수 시장과 함께 시작하면서 2년이 넘도록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해왔지만 정작 보직인사에서는 여유를 가질수 있는 자리를 옮기는커녕 교육자원으로 내팽겨쳐 버리는 '파내 기식 인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사실 시 공무원 모두가 M국장은 이번에 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에게는 사전 의견도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통보했다.

때문에 산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장을 믿고 전주시와 조직을 위해 헌신한 대가치고는 가혹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올 상반기 서기관 4명의 승진자리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로 공로연수 예정인 A본부장의 명퇴를 강요해 A본부장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직을 떠났다.

과거 시장의 경우 A본부장처럼 일찍 떠나도록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산하부서에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불만을 잠재시켜왔지만 이번 김승수 시장체제에서는 냉정하게도 이를 찾아볼수 없다.

또, W국장의 경우는 전주시 최대 골칫거리인 쓰레기 등 청소관련 부서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당연히 구청장이나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자리에 또 다시 근무토록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그러자 W국장은 명퇴를 신청했고 김 시장은 W국장에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6개월 만 더 근무해 줄 것"

을 요구, 죽도록 일한 대가가 고작 6개월 더 일해 달라는 말에 W국장은 출근도 포기하고 사표까지 제출했었다는 것이다.

W국장은 김 시장이 6개월 후에 명퇴를 받아 주겠다는 말을 한 것에 분통을 터트리며 사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산하공무원들은 이처럼 W국장이 반발했던 것에 대해 일부 국장들을 특정 보직에 내정해 놓고 나머지 서기관들만 순환보직 인사를 진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니냐며 지휘부서의 어설픈 인사행정에 대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김시장 당선후인 1~2년 전에 능력이 안되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킨데다 '꽃보직'만 보내려다 보니 전주시 개청 이래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대상 유통질서 지도·점검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주일 동안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관내 대규모 점포 9개소와 기업형슈퍼(SSM) 27개소를 대상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 분야와 농축수산물 분야, 가격표시제 분야, 상거래저울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전 점검은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가격표시 및 단위가격 표시 △상거래 저울 구조 및 정기검사 여부

등이다.

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거래 저울 조작 및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기영 전주시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설 귀성객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키로

27일부터 30일까지 교통 대책 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성묘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을 설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성묘객,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교통상황 파악 및 각종 교통관련 사고의 신속한 처

리 등을 위해 시청과 양 구청에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1일 9개반 14명 등 총 57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노송천 등 공영주차장 3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설 당일에는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4곳과 건천천 1·2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1곳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특히,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흐름관찰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상황 파악 및 교통 정체지역의 탄력적 신호 운영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

다.

이와 함께, 시는 성묘객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효자공원묘지와 천주교 공원묘지에는 1,280여대의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차량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휴시작 전 명절준비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타임빌 등의 주변도로는 매일 5개반 10명의 근무조를 편성해 소통위주의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주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시설 등을 점검 및 정비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불법 선거 운동한 4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1일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 팀장 박모씨(41,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유세팀장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나흘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과 색깔이 같은 선거유세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사무원, 활동보조인 등 신고가 된 정식 선거캠프 인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같은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U-20 월드컵 성공개최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주시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시는 11일~12일 이틀간 U-20월드컵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고, 대회의 얼굴로 활약해줄 자원봉사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FIFA U-20월드컵 코리아 자원봉사자 면접심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집된 330여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3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교육과 훈련을 거쳐 오는 4월중 200여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면접심사에는 전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휴가를 쓰고나온 현역군인과 대회기간 동안 휴가를 쓰고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직장인, 학생시절의 열정을 되찾아보겠다는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U-20월드컵대회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했다.

시는 자원봉사자의 핵심요소인 소양과 열정을 갖춘 봉사자 선발을 위해 언어능력(영어)과 참여의지, 업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최적의 적임자를 선발, 대회기간 중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119 안전 체험관, 전북 투어 패스 자유 이용 시설 지정 '호평'

연 방문인원 15만명 달성

안전을 관광상품에 접목시켜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의 119 안전체험관이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 시설로 지정된 관광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전북 119안전체험관은 화재, 지진, 태풍 등 재난 발생상황시 대처능력을 키우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된 종합안전체험 시설이다.

지난 2013년 3월 개관한 이후 매년 체험객이 증가하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연 방문인원 15만명을 연속으로 달성했다.

전북도는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119안전체험관을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은 전북투어패스를

발급 받을 수 있게돼 주변 제휴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고 맛집과 숙박시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119안전체험관이 앞으로 전국 제일의 안전명소로 발돋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안전체험 품질관리를 통해 체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시설 투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